

## 국내 소식

폐기물 재활용으로  
4년간 1조7천억원 경제적 편익”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4년간 시행한 결과, 플라스틱 포장재, 금속캔, 전자제품 등 폐기물 총 469만톤을 재활용하여 총 1조7,256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3,2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재활용을 위해 투입된 운반·처리비용 등 직접비용 8,85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8,401억원의 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매립지 사용연수 증가, 원자재 사용절감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더욱 막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제도 시행 이전인 2002년 93만8,000톤보다 35.5%가 증가한 127만 1,000톤을 재활용하는 등 4년간 총 469만톤을 재활용했다.

품목별로는 전자제품이 4만3,000톤에서 9만 3,000톤으로 116%, 플라스틱 포장재는 15만톤에

서 29만5,000톤으로 97%가 증가했다.

유리병과 금속캔의 경우는 맥주·청량음료의 포장용기가 PET로 바뀌는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여 '05년 대비 유리병은 3%, 금속캔은 6% 정도 재활용량이 감소했으나 재활용률은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4년 동안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유가 급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폐기물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확충, 국민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적극적 참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 도로공사 소음피해 2700만원 배상토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포항시와 A건설사에 “도로공사장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에게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은 각각 82dB(A) 및 72dB(V)로, 소음은 피해인정기준인 70dB(A)을 훨씬 초과해 피해를 인정했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인 73dB(V)를 넘지 않아 피해를 불인정했다.

먼지와 건물피해도 피신청인이 방음벽·방진막·살수차·세륜시설 등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했고, 공사장비 사용시의 진동속도가 0.25cm/sec로 추정되어 피해인정기준(0.3cm/sec)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피해를 불인정했다.

위원회는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실제거주기간, 평가소음도, 최근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06명에 대해 1인당 8만원 ~57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 매연없는 CNG버스 14,127대 보급



CNG버스 보급 우수기관 시상식이 지난달 25일 환경부 장관실에서 이규용 환경부 장관,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및 수상업체(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우수기관으로 환경부장관상을 받은 업체는 진주시민버스(주)를 비롯해 (주)삼천리도시가스 및 서울시 등 총 11개 업체·기관이다.

지난 2000년 보급을 시작한 천연가스버스는 2007년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14,127대에 이르며, 향후 3년 이내에 목표 23,000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5년 2월 CNG버스 정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한·싱가폴 MOU를 체결하였고, 같은해 7월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 19명이 방한하여 천연가스버스 보급 정책 및 기술현황 등을 견학했다.

2006년 6월에도 태국 정부 및 관련업계 대표단 37명이 환경부를 방문함에 따라 한국의 CNG버스 보급정책이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자동차 관련업계의 CNG 버스 및 관련부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2,200만 달러, 2005년 3,300만 달러, 2006년 3,030만 달러 수출이 이루어졌다.

매연발생이 전혀 없는 CNG버스 보급정책은 대

도시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수적으로 는 대체에너지 사용으로 석유 의존도를 낮추며, 수출까지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비점오염 유발 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한강유역환경청은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이번달까지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 실태 등에 대해 최초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한 총 55개 사업장 중 실제 공사에 착공한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비점오염원 관리담당자 지정,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및 관리·운영대장 비치 여부 등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비점오염에 의한 수질오염 부하량이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42~69%를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에 대한 관리 없이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2005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비점오염 유발 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 ▲'비점오염'이란?

'빗물오염'이라고도 말하며,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과 같이 불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빗물 혹은 눈 녹은 물과 함께 하천과 호수, 바다로 흘러 내려가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도로에 흘린 유해물질(기름, 폐기물 등), 도로건설 및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흙탕물, 농지의 잔류농약 등

이 빗물에 씻겨 내려 주변환경(하천, 호소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 「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 순회교육 실시

UN의 GHS(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기준을 반영,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s Safety Data Sheets)에 관한 기준'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취급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독성·취급주의사항, 사고시 대처방법 등의 유해·위험 정보를 기재한 자료다. 이와 관련,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도의 정착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 화학물질 업무 담당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 6곳과 화학업체 등이 밀집한 반월·시화공단 등 4곳을 순회하면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표시기준이 국제기준(GHS)과 달라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던 경고표지의 이중 부착, 유해·위험정보의 혼선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며 사업장에서는 순회교육 일정에 따라 편리한 시간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참여, 정보제공 등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GHS 상담창구(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042-869-0312)나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팀(☎032-5100-720),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02-6922-0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석면 피해 신고는 1588-3920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고 싶은 사람은 ☎1588-3920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을 위해 '석면 피해 신고센터'를 지정하고 전담 업무자에 의한 상담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부산지역의 석면 공장 인근 주민의 악성 중피종 발병 보도와 관련하여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현재 제정중인 '환경보건법'이 시행되면 신고센터 업무범위를 단순 상담업무에서 국가차원의 피해 지원업무까지 확대하고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석면 피해관련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2008 람사르총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환경부와 경상남도는 지난달 27일 경남도민회에서 2008 람사르총회에서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할 자원봉사자 40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를 축하하는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2008 람사르총회 자원봉사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총회 기간 동안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통역, 숙박 및 교통안내, 관광가이드 등의 분야에서 봉사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자원봉사자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400명이 엄선되었으며 약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람사르총회 개최 1년을 앞두고 정부차원의 준비기획단을 발족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외교 위상을 높이기 위한 총회 행사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는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 까지 8일간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며 약 160개 국의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NGO 등 1,300 여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규모의 총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 폐목재 재활용률 66%까지 높인다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폐목재의 재활용이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폐목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20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율을 66%까지 높일 계획이다.

2005년 현재 국내 폐목재는 임목부산물 244만 8000t을 포함해 총 511만5000t이 발생했지만 이중 183만7000t만 수거되거나 재활용됐다. 이는 전체의 36% 수준이다. 폐목재 재활용율이 66%까지 늘어나는 경우 목재 및 석유자원의 수입대체 효과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등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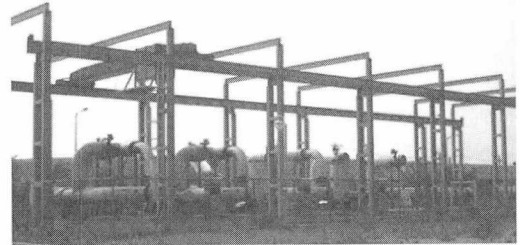
최근 유가상승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서 목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가 상승으로 사용량의 91%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목재산업은 원료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폐목재의 관리 및 재활

용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재정 사업을 확대하며,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과 재활용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폐목재 재활용설비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현재의 3%에서 7%로 확대하고 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쓰레기 매립가스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발전 및 냉·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잉여 매립가스(LFG)는 자동차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제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립가스정제는 매립가스(LFG)에 포함된 메탄(CH<sub>4</sub>)을 고순도(97%±1)로 정제하여 자동차연료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경유차량에 비해 매연이 거의 없고 배출가스는 70%, 질소산화물 63%, 소음 50%를 저감할 수 있는 청정연료다. 분당 약 30m<sup>3</sup>의 매립가스 정제설비가 설치되면, 현재 수도권 쓰레기를 운반하는 청소차량 약 200대/일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으며, 압축 및 충전시설은 기존 CNG 충전소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시설 설치는 불필요하다.

시설설치비는 약 30여억원이 소요되며, 운영비 9억원을 제외하고도 연간 22억원의 경제적효과가 따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와 협의중이며, 이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저감 및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 한국금융연구원장 초청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연사로 초청해 '최근 국제금융시장 주요 이슈'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동걸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최근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

위원회(FRB)가 금리인하를 시사하고, 부시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 말하고 "그러나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불안이 단기간에 쉽고 깨끗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돼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해외수요가 감소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6월말 현재 8억4천만 달러로 추산되는 국내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의 경우 대부분 신용등급이 양호한 만큼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낮고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비중도 낮으며 미국처럼 MBS(주택저당증권) 등의 파생상품을 통한 부실파급 경로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간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유입된 엔 캐리 자금의 규모가 작은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국내 기업의 경우 대부분 장기차입이 이뤄지는 등 자산건전성과 관련된 단기적인 위험은 적은 편이지만 엔화차입비중이 높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투자비중이 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엔화강세와 자산가격 하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